

# 대학도서관 목록문제의 본질과 해법\*

## An Investigation on Catalogs and Cataloging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이 제 환(Jae-Whoan Lee)\*\*

### < 목 차 >

- |                  |                  |
|------------------|------------------|
| I. 글을 시작하며       | 2.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부재 |
| II. 목록문제의 본질     | IV. 목록문제의 해법     |
| 1. 목록의 열악한 품질    | 1. 목록에 대한 인식 개선  |
| 2. 편목업무의 역량 약화   | 2.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 |
| III. 목록문제의 원인    | V. 글을 마무리하며      |
| 1. 목록에 대한 인식적 오류 |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해 있는 목록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혀내어 향후 개별 도서관은 물론이고 도서관계 전체가 참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서관목록의 품질과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목록의 품질 문제와 편목업무의 역량 문제를 야기해온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찾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후자의 원인 찾기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목록에 관련된 '철학과 인식의 문제, '정책과 체계'의 문제, 그리고 '인력 시스템의 문제 등에 주목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목록의 품질과 편목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KERIS 종합목록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주요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논점을 풀어갔으며, 논점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관련 선행연구, 각종 통계집의 관련 통계, 10개 대학도서관 목록에 대한 검색실험, 그리고 사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목록, 편목업무, 자료조직, 정보조직, 목록정책, 편목정책, 도서관정책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raise the critical issues on both catalogs and cataloging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and to explore the feasible solutions to resolve the issues. To the end the first task is a though examination on both the quality of library catalogs and the work capacity of catalogers, and then it is followed by a careful investigation on the causes of both poor quality of library catalogs and low capacity of cataloging work. Finally suggested is some indigenious solutions to improve the low capacity of cataloging work as well as the poor quality of library catalogs. Discussions on this research are based on both search experiments on library catalogs and field interviews with catalogers of 10 major Korean academic libraries.

Keywords: Academic libraries, Library catalogs, Cataloging, Cataloging system, Information organization, Cataloging policy, Library policy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논문접수: 2015년 11월 3일 •최초심사: 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45-78,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45]

## I. 글을 시작하며

전통적으로 도서관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힘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즉 장서에 대한 장악력에 근거하였다. 사서의 두뇌에 축적되어 있는 장서에 대한 지식은 사서가 도서관의 유일한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필요조건이었다. 장서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사서는 새로운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의 부족이나 왜곡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는 도서관이용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장서에 대한 사서의 지식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목록이었다. 도서관목록이 오랜 세월 사서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도서관이용자를 실물 장서로 안내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도서관목록은 장서에 대한 사서의 지적 역량을 농축해 놓은 배타적 창작물이자 사서직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독보적 증좌였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을 서구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온 '한국 도서관학'의 개척자들이 '편목업무'에 관한 지식을 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핵심 강좌로 삼았던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였다. 그들은 도서관의 장서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지적 도구를 만드는 작업은 사서직의 배타적 전문성을 보여주는 고유의 업무라고 믿었다. 그러한 개척자들의 믿음은,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 환경이 급변하고 전통적인 목록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인다. 비록 강좌의 명칭은 애매모호해 졌지만 '편목업무'에 관한 강좌는 2015년 현재까지도 한국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에서 핵심 교과목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이라! 편목업무에 관한 지식은 사서공무원을 선발하는 각종 시험에서도 핵심 영역을 차지한다. 문헌정보학계는 물론이고 도서관계에서도 편목업무에 관한 지식을 사서직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적 기반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이러한 믿음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목록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에 동반하여 편목업무의 비중 또한 축소되었다. 그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리 도서관목록이 정보생태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도 크지만, 주제목록을 결여한 '반쪽자리'라는 선천적 장애를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도서관이용자들은 검색도구로서의 유용성이 '수준 이하'인 목록을 외면하였고, 도서관경영자들은 고객이 외면하는 목록의 생산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 결국 편목업무의 비용효과를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편목부서와 인력의 축소가 잇따랐고, 기존 업무의 공백은 임시직에 의한 복사편목(copy cataloging), 외주편목(outsourcing of cataloging), 혹은 외부 제작 MARC의 구입 등으로 대체되었다.

이렇듯 도서관 내부로부터 시작된 편목업무의 가치 폄훼로 인해 우리 목록이 자생적으로 품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태생적 결함으로 인해 반쪽자리로 연명해온 우리 목록이 편목업무의 주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존재가치마저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열악한 품질의 목록이 편목업무를 ‘하찮은’ 주변 업무로 추락시키더니, ‘하찮아진’ 편목업무로 인해 목록의 열악한 품질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되어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 현장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되는 동안 우리 문헌정보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에서 편목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처럼 편목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목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일한 노력을 우리 학계에서는 과연 전개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근거한다. 물론,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도서관목록의 품질에 주목하면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우리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전개되어 왔다(이제환 1997; 2002; 노지현 2003; 2005; 2009; 윤정옥 2003; 김선애, 이수상 2006; 이유정 2006; 이은주, 이제환 2012 등). 아울러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을 경계하면서 그의 확산으로 인한 폐해를 입증하려는 이론적 혹은 실증적 노력 또한 우리 학계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윤희운 2000; 윤정옥 2004; 노지현 2006, 2009; 이유정 2006 등). 그러나 그들 연구의 대부분이 일회성 문제 제기로 그치거나 우리와는 도서관문화와 사서직제도가 상이한 도서관선진국의 관점에서 논점을 풀어가다 보니, 우리 도서관목록에 내재된 토착적이고 구조적인 난제를 풀어가는 데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우리 도서관계의 목록문제를 우리 고유의 도서관문화와 사서직 제도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 절실하며, 그러한 토착적인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만 비로소 목록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우리 도서관목록의 품질과 우리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목록의 품질 문제와 편목업무의 역량 문제를 야기해온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찾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후자의 원인 찾기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목록에 관련된 ‘철학과 인식’의 문제, ‘정책과 체계’의 문제, 그리고 ‘인력 시스템’의 문제 등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맥락에서 목록의 품질과 편목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토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고자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KERIS 종합목록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22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온라인 서지 신규 업로드 시 신규 채택 비율”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학도서관(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의 중앙도서관)을 사례로 하

여 진행하였다. 이들 10개 대학도서관은 편목업무의 공인된 성과와 역량(조직과 인력) 면에서 여타 대학도서관은 물론이고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앞서있기에 이들 도서관을 사례로 삼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목록의 현실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더불어 앞서 제시한 논점을 풀어 가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관련 선행연구, 각종 통계자료집의 관련 통계, 10개 대학도서관 목록에 대한 검색 실험, 그리고 관련 사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sup>1)</sup>

## II. 목록문제의 본질

서론에서 밝혔듯이, 도서관목록과 관련하여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열악한 목록의 품질’과 ‘약화된 편목업무 역량’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목록의 품질이 열악하다 보니 목록의 유용성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어 왔고, 그 와중에 편목업무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편목을 담당하는 사서의 업무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왔다는데 우리 목록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도서관계에서 목록문제는 단순히 목록 자체의 품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목록의 품질에 대한 의문은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의문은 편목업무의 가치를 폄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업무역량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데 목록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면서 필자는 지금부터 우리 목록의 품질을 유용성의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며, 우리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을 전담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목록의 열악한 품질

우리 도서관계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목록의 품질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비록 소수였지만 목록의 품질 문제에 주목한 학자들은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품질검증을 통해 ‘목록의 열악한 실체’를 밝혀내었으며, 목록의 품질이 열악해진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품질 개선을 위한 처방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이제환 1997; 2002; 노지현 2003; 윤정옥 2003; 이유정 2006; 김선애, 이수상 2006; 노지현 2009; 이은주, 이제환 2012; 노지현, 임정주 2015 등). 그들 중에서 특히 이제환 등은 목록의 품질을

1) 논의에 필요한 통계는 『국립대학도서관보』(2005~2014),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2005~2014), KERIS Webzine 등에 수록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였으며, 편목업무에 관한 사서들의 개별적인 의견 수렴은 2015년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검증함에 있어 기존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더해 ‘이용자의 유용성’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목록의 품질 문제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와 이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노지현 등은 우리 목록의 품질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도서관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품질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우리 도서관계의 토착적인 환경을 고려하였다.

이제환과 노지현을 비롯한 문헌정보학자들이 도서관목록의 품질 개선을 위해 제시하였던 처방은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령,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그들이 제시하였던 국가 차원의 편목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태이다. ‘일괄 생산’이든 ‘분담 생산’이든 편목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체계를 구축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력을 목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입하자는 그들의 제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KERIS를 통해 부분적으로 구현되는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목록의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설립(혹은 설치)하자는 제안 또한 외형적인 모양 갖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2)</sup> 그래도 그러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응은 차라리 양호한 편이다. 목록 데이터의 표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거시스템의 구축은 여전히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며, 편목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혁신하자는 제안이나 도서관의 인력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제안 등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다.

이렇듯 목록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학자들이 제시해온 처방은 도서관 현장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용되는데 그쳤다. 그러한 상황에서 목록의 품질이, 특히 이용자가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과욕에 불과하다. 2012년에 발표된 이은주와 이제환의 연구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목록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포괄적 탐색도구로서의 기대와 이용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을 찾는 대학생들의 ‘자료탐색과정’에서 관찰되는 가장 뚜렷한 행태적 특징은 “인터넷서점이나 서평 도구와 같은 다른 정보원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한 후, 그러한 자료의 소장 여부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목록을 이용한다”는 점이었다(이은주, 이제환 2012). 대학생들이 목록을 도서관 소장 자료의 포괄적 탐색을 위한 핵심 도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자료의 획득을 위한 보조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의 핵심 이용자집단인 대학생들의 목록에 대한 기대치가 ‘보조 도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자명하다. 목록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하려

2) 주지하다시피 KERIS의 종합목록운영위원회나 한국도서관협회의 목록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목록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거나 전무한 상태에 있다.

는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 목록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 즉 주제 접근성의 문제와 데이터의 표준성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불완전한 품질’을 목록을 이용해본 경험자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목록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P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던 이용자들의 고백에 그대로 녹아있다.

“도서관에 가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책을 찾고 싶어서 목록의 검색창에 ‘노인복지’라고 입력했는데 몇 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서가에 가서 둘러보니까 관련 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가에 가지 않았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그 때 이후 목록에서는 대략적인 서가 위치만 파악하고 직접 서가에 가서 훑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일이 훑어보려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찾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충 훑어보다가 적절해 보이는 책이 있으면 들고 나와요... 목록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물론 낫지요. 그런데 딱 그 정도 눈높이에서 유용한 것 같아요.”

주제적 접근의 한계가 우리 목록의 유용성 제고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은 2015년에 발표된 노지현과 임정주의 실험적 연구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을 교보문고, LC 그리고 LibraryThing의 목록에 비교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 포함된 주제명 데이터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조악한 상태에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가 평균 1.28개의 주제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교보문고의 목록레코드는 19.22개, LC의 목록레코드는 3.94개, 그리고 LibraryThing의 목록레코드는 무려 197.86개의 주제명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양적 열세를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어는 ‘용어의 상세성 수준조차 매우 낮아서 “관련 자료를 주제적으로 검색하고 식별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그들의 결론이다<sup>3)</sup>(노지현, 임정주 2015).

그러나 특정성이 낮은 용어라 할지라도 주제명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주요 대학도서관들의 목록은 단 한 개의 주제명 데이터조차 없는 서지 레코드들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다. 교양서는 물론이고 전공서의 서지 레코드 또한 기본적인 주제명 데이터조차 결여하고 있으며, 단지 번역서의 경우에 원저의 주제어를 원어 그대로 서지 레코드에 나열해 놓은 도서관들이 간간이 눈에 띈 뿐이다. 이렇듯 목록을 통한 주제 검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3) 가령, 역사서인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라는 단 1개의 주제어가, 소설의 경우에는 ‘미국현대소설’이라는 단 1개의 주제어가 할당되어 있는 등, 관련 자료를 주제적으로 검색하고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특정 주제(혹은 테마)와 관련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도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역설적이게도 문헌정보학자가 있는 Y대학, K대학, P대학, S대학 그리고 E대학의 도서관에서조차 ‘문헌정보학의 핵심 영역’에 관련된 단행본을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sup>4)</sup> 이렇듯 주제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도서관목록을 외면하거나 한정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주제적 접근의 한계에 더해서 목록 데이터의 표준성 결여 또한 탐색도구로서의 목록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지하다시피 목록 데이터의 표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이미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정한 전거포맷인 「KORMARC-전거통제형」은 급변하는 목록환경과 도서관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까지 방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국가 차원의 전거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국가 전거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목록의 접근점이 되는 데이터의 표준성 결여로 인한 낮은 검색효율 문제로 고민하던 일부 대학도서관들이 자관의 실정을 고려한 전거규칙을 만들어 나름대로 전거파일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거포맷은 물론이고 전거형의 선정과 형식 그리고 기술내용 또한 상이하다 보니 그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전거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던 계획 또한 수년째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노지현, 이미화 2014). 이렇듯 전거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목록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색의 재현율은 물론이고 정확률마저 저조하다보니 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학습된 회의’는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목록 데이터의 표준성 결여가 이용자들이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대학도서관 중에서 전거데이터를 구축해온 대학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검색실험을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가령, 개인 저자명에 대한 전거데이터를 구축해온 E대학도서관의 목록과 그렇지 않은 K대학도서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인인 ‘등소평’과 ‘덩샤오핑’이 저술한 단행본을 검색해 보자. 검색 결과, E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는 ‘저자=등소평’에 대한 검색결과(9건)와 ‘저자=덩샤오핑’에 대한 검색결과(9건)가 정확히 일치하였으나, K대학도서관의 목록에서는 ‘저자=등소평’에 대한 검색결과(42건)와 ‘저자=덩샤오핑’에 대한 검색결과(20건)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sup>5)</sup> 이처럼 간단한 검색실험에 불과하였지만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전거데

4) 문헌정보학의 세부 주제인 ‘장서개발’이나 ‘자료조직’ 혹은 ‘참고봉사’와 관련된 단행본의 소장 규모를 헤아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5) 毛澤東(마오쩌둥), 三浦綾子(미우라 아야코) 등을 사례로 한 이형 저자명에 대한 검색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터의 존재 여부는 검색효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도서관이용자들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대학도서관 목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거데이터의 유무와는 관련성이 약하지만 목록의 검색기능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 분명히 저자명 검색(‘저자=등소평’)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 저술한 자료뿐만 아니라 등소평에 관한 저술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색되는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앞서의 검색실험을 통해 검색된 K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42건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등소평이 저술한 자료는 단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8건은 등소평에 관한 자료임이 드러난다. 이처럼 K대학도서관 목록의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 중에서 그들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검색의 불완전성이 K대학도서관 목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주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E대학도서관과 S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대학도서관 목록들이 동일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도서관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적합한 정보’를 원하는 도서관이용자들에게 목록은 여전히 ‘유용성에 한계를 지닌’ 보조도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편목업무의 역량 약화

목록의 품질, 특히 이용자가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은 목록을 만드는 사람(혹은 집단)의 역량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물론 편목업무를 위한 규칙이나 규정, 도구나 시스템, 그리고 조건이나 환경 등의 요소가 목록의 품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것이 편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혹은 집단)의 역량이다. 주지하다시피 업무역량은 크게 업무 자체를 대하는 태도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을 검증하고자 한다면, 편목업무를 대하는 도서관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하여야 하며, 편목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사람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두 지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2015년 현재 우리 도서관계가 목록과 관련하여 안고 있는 두 번째 고민의 본질이 드러난다. 즉, 이 두 지표 모두에 있어 부정적인 양태가 관찰되며 그러한 부정적인 양태가 개선될 기미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편목업무를 대하는 도서관사람들의 ‘태도’를 가늠하기 위해 필자가 주목한 요소는 도서관 현장에서 편목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의 규모이었다. 즉, 편목업무에 할당된 사서의 수적 변화를 추적해 봄으로써 도서관에서 편목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편목업무를 전담하는 도서관사람들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필자가 주목한 요소는 편목업무에 종사해온 인력의 업무경력이었다. 특히 전임 사서들이 편목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을 추적함으로써 편목업무를 위한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축적되어 왔는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표 1>과 <표 2>에 정리해 놓은 데이터는 최근 10년(2005년~2014년) 동안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10개 주요 대학도서관에서 편목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편목사서의 업무능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명료하게 보여준다.

<표 1>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편목업무를 전담하는 사서의 대폭적인 감소이다. 10개 대학도서관에서 편목업무를 담당하던 사서의 수는 2005년에는 69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36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물론 도서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여 편목사서의 감소를 보편적인 추세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화여대도서관 등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인력의 감소 추세가 뚜렷함을 관찰할 수 있다.<sup>6)</sup> 특히 한양대학도서관을 비롯한 성균관대학도서관이나 경희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편목업무의 존속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대폭적인 인력 감축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사립대학도서관에서 편목을 전담하는 조직은 이미 사라져 버렸으며, 심지어 단 한 명의 사서가 편목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편 서울대학도서관을 비롯한 3개의 국립대학도서관에서는 이들과는 다소 다른 양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편목업무에 투입되는 사서의 규모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편목업무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편목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표 1>의 데이터는 편목업무를 대하는 도서관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편목업무의 주체성 확보를 위해 편목사서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대학도서관, 편목업무의 전반적인 외주를 통해 편목사서의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대학도서관, 그리고 편목업무의 부분적인 외주를 통해 편목사서를 감축하되 적정 규모를 유지하려는 대학도서관이 그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대학도서관계에서 첫 번째 그룹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며, 세 번째 그룹 또한 거점국립대학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으며, 그들 도서관의 경우 편목업무의 외주가 보편적인 업무행태로 굳어지면서 편목사서의 개념조차 희석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편목업무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행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어찌 편목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서의 역량이 강화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6) 표에 나타나듯이, 이화여대도서관을 비롯하여 연세대학도서관이나 서강대학도서관과 같이 자체적인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여 목록의 품질을 관리해오던 대학도서관에서는 편목사서의 규모는 물론이고 편목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 또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 대학도서관의 편목업무 전담 사서 현황(2005년~2014년)

(단위=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희대	편목사서	4	4	3	2	2	2	2	1	1	1
	편목책임	계장	계장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겸무
	전체직원	22	22	22	20	20	20	20	20	20	17
고려대	편목사서	5	5	3	3	3	3	4	2	2	2
	편목책임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전체직원	41	43	48	47	47	52	52	45	44	43
서강대	편목사서	2	3	3	2	2	2	2	2	2	2
	편목책임	계장	계장	차장	계장	계장	계장	과장	과장	차장	차장
	전체직원	20	20	19	20	20	21	22	22	23	22
성균관대	편목사서	4	3	1	1	1	1	1	1	1	1
	편목책임	과장	계장	사서겸무	사서겸무	사서겸무	사서겸무	사서겸무	사서겸무	사서겸무	사서겸무
	전체직원	34	32	34	34	31	30	29	27	27	27
연세대	편목사서	7	7	7	6	6	5	5	6	6	5
	편목책임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차장	차장
	전체직원	35	35	35	42	46	46	45	44	44	38
이화여대	편목사서	5	5	5	5	5	5	5	5	5	5
	편목책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과장	과장
	전체직원	34	34	34	34	35	35	34	32	34	38
한양대	편목사서	5	4	4	4	1	1	1	1	1	1
	편목책임	계장	계장	계장	계장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전체직원	36	35	34	34	35	34	34	27	27	24
경북대	편목사서	13	13	10	10	12	10	6	6	6	6
	편목책임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전체직원	46	48	48	56	57	61	50	50	50	51
부산대	편목사서	9	8	7	7	5	4	4	4	5	5
	편목책임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전체직원	46	47	49	48	49	49	52	50	50	51
서울대	편목사서	15	15	14	14	12	11	6	5	7	8
	편목책임	사무관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주사
	전체직원	115	124	124	126	122	108	109	108	96	101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2005~2014)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2005~2014)

한편, 우리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은 편목업무에 투입되어 온 사서의 업무경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편목업무는 ‘업무의 숙련도’가 양적 생산성은 물론이고 질적 생산성에도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하기에 도서관선진국에서는 편목사서(cataloger)를 일반 사서(librarian)로부터 분리하여 운용하는 인력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수십년 경력의 중견 편목사서들이 후배 편목사서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도제식 인력 양성 행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 도서관계에서도 편목업무의 외주와 도서관망을 통한 복사편목(copy cataloging)이 증가하면서 편목업무에 투입되는 전문사서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도서관마다 포진하고 있는 중견 편목사서들의 존재는 그들 도서관계의 편목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편목사서 집단으로 하여금 도서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의 상황은 도서관선진국들의 상황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표 2>의 데이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주요 도서관에서조차 편목업무에 종사해온 사서의 업무경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편목업무에 투입되는 사서의 평균 업무종사기간은 2~3년에 불과하여 그들에게서 ‘숙련된’ 편목업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차라리 허욕임을 일깨워 준다. 실무사서뿐만이 아니다. 표의 데이터는 편목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견 사서의 평균 근무연한이 실무사서의 평균 근무연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서관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편목업무의 조직적 역량을 축적하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인력 구조인 것이다. 물론 표에 정리한 조사 결과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화여대도서관이나 연세대학도서관과 같이 편목업무의 가치를 중시해온 대학도서관에서는 실무사서는 물론이고 책임사서의 근무연한이 다른 대학도서관에 비해 현저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 도서관에 불과하지만 편목업무의 조직적 역량이 나름대로 축적되어왔다는 증거이다. 더불어, 비록 숫자는 미미하지만 장기간 편목업무에 종사해온 ‘경력 사서’의 존재를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숙련된 업무경험을 가진 편목사서들이 우리 대학도서관계에 그나마 산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이다.

<표 2> 주요 대학도서관 편목업무 전담 사서의 평균 근무연한 (2005년~2014년)

(단위=년)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실무사서	1.8	3.5	3.3	1.2	7.5	4.3	2.6	2.5	2.6	2.7
책임사서	2.8	4.5	3.2	1.5	5.0	4.5	2.5	2.0	2.5	2.1
최장근무	5.0	10.0	7.0	3.0	10.0	10.0	8.0	6.0	4.0	8.0

<출처> 『국립대학도서관보』(2005~2014)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편람』(2005~2014)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편목업무에 투입되어온 대부분의 사서들에게서 업무경력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읽어내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편목업무에 익숙할 만하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켰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편목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순환보직의 악습은 사서들로 하여금 편목업무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듯 편목업무의 전문성을 스스로 폄훼하고 부정하는 인사행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업무환경에서 편목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축적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과욕을 넘어 허욕에 다름없다. 편목업무의 주체적인 역량을 축적하기는커녕 편목사서라는 배타적 직무 영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황이 위급하기에 필자는 ‘편목업무의 역량 약화’를 우리 도서관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목록문제의 본질로 보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편목업무의 위축과 그에 따르는 업무역량의 약화는 편목업무의 대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그러한 비주체적인 업무행태가 구조화될수록 목록의 품질은 더욱 조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목록의 무가치론과 편목업무의 무용론을 주창하는 도서관 경영자와 이용자의 모습을 더욱 빈번하게 조우하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필자의 추론이 과도한 우려가 아님은 이번 연구에서 심층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P대학도서관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P대학도서관의 사례는 2013년 현재 대학도서관의 주체적인 편목업무 역량이 어떤 수준에 있으며, 편목업무의 역량 약화가 어떻게 목록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서직의 직업적 전문성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sup>7)</sup>

〈표 3〉 P대학도서관의 작업 주체에 따른 단행본 정리 현황 (2013년도)

(단위=권)

작업 주체별 정리량		자료 종류별 정리량		도입 방법별 정리량	
자료조직팀 (5명)	39,393	국내서	18,173	구입	15,163
				수증	3,010
		동양서	7,461	구입	3,657
				수증	3,804
		서양서	13,759	구입	11,316
				수증	2,443
보조인력 (임시직)	11,211	국내서	9,085	구입	6,934
				수증	2,152
		서양서	2,126	구입	400
				수증	1,726
외주업체	43,940	국내서	40,990	구입	24,175
				수증	16,815
		동양서	2,950	구입	0
				수증	2,950
전 체	94,544	국내서	68,248	구입	46,271
				수증	21,977
		동양서	10,411	구입	3,657
				수증	6,754
		서양서	15,885	구입	11,716
				수증	4,169

〈출처〉 P대학도서관 내부 자료

〈표 3〉의 데이터는 2013년도 P대학도서관의 단행본 정리 현황을 작업주체, 자료의 종류, 그리고 자료의 도입방법에 따라 세분해 놓은 것이다. 표의 데이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P대학도서관의 편목업무 대외 의존도가 거의 6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내서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무려 73%에 이르고 있어 외부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편목업무의 시의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7) 특정 대학도서관의 통계를, 그것도 특정 시기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편목업무의 대외 의존성을 적시한다는 것이 논의의 보편성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대학도서관의 경험이 편목업무의 대외 의존성과 관련한 우리 대학도서관계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만드는 것은 그러한 대외 의존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속내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다 명료해 진다. P대학도서관이 편목업무의 외주를 시작한 까닭은 증가일로에 있던 ‘미정리’ 자료를 정리하고자 함이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처럼 P대학도서관 또한 장서의 양적 경쟁에 집착해 왔고, 그에 따른 수증자료의 적극적인 개발과 특수 자료(취업자료 등)의 대량 구입은 도서관의 역점 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이처럼 도서관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료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미정리 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편목업무의 외주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편목업무의 외주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외주의 대상 뿐 아니라 편목사서의 업무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먼저, 외주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에 변화가 왔다. 외주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도서관에 유입되는 ‘주변 자료’가 주로 외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점차 편목사서의 시간을 과도하게 빼앗거나 편목사서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주요 자료’가 외주의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복사편목이 어려운 일중서나 서양서는 자연스럽게 외주의 대상이 되었다. 편목사서의 작업용 책상 위에 두터운 전공서적 대신에 교양서적이거나 소설류가 늘어났고, 작업량을 외형적으로 늘리는데 유리한 복본이나 분책 형태의 자료가 많아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편목업무의 숙련성이 축적될 수 없는 업무환경인데, 외주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구조화되면서 정규직 편목사서의 역량은 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P대학도서관 목록의 품질에 하자가 많다는 방증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가령, P대학도서관목록의 품질을 검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유용성은 물론이고 서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표준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 있어서조차 품질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은주, 이제환 2012; 이은주 2014 등). 그 뿐만이 아니다. KERIS 종합목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종합목록(UNICAT)의 구축에 있어서 P대학도서관의 기여도가 양적인 면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양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 회의록에 수록된 ‘종합목록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양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즉 ‘대학별 서지 신규 구축 현황’)에 있어서 P대학도서관의 기여도는 조사 대상 20개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5위(19,484건)로 상위권에 속해 있다. 그러나 질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즉 ‘온라인 서지 신규 업로드 시 신규 채택 비율’)에 있어서는 16위(20.1%)에 그쳐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ERIS 2015).<sup>8)</sup> 2010년 이후 편목업무의 외주를 ‘구조화’해온 결과로 보이며, 도서관이용자들의 목록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8) KERIS, 「Webzine」, 제49호(2015. 6). [http://unicat.riss.kr/webzine/final\\_webzine/popup\\_15\\_06\\_01.htm](http://unicat.riss.kr/webzine/final_webzine/popup_15_06_01.htm) [cited 2015. 10. 15].

원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P대학도서관의 사례는 편목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의 약화가 목록의 품질 개선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서비스 및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도서관 내외의 의문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Ⅲ. 목록문제의 원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목록문제의 본질은 ‘열악한 목록의 품질’과 ‘약화된 편목업무 역량’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편목업무를 역량 약화가 목록의 품질 저하를 구조화하는 핵심 인자임을 학습하였으며, 편목업무를 역량 약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사서직의 배타적 전문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문은 증폭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서직의 직업적 안전성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선의 도서관 현장에서 편목업무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목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를 통해 사서직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묘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의 논의는 그러한 ‘묘수 찾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단지, 목록문제의 본질을 나름대로 규명하였으니 목록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먼저 밝혀냄으로써 이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처방이 보다 근원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다.

#### 1. 목록에 대한 인식적 오류

필자는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목록문제는 목록의 가치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 내외의 인식적 오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즉, 가치론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오류가 목록의 품질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편목업무를 끝없이 추락시켜온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렇다면 목록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목록을 통해 도서관사람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목록학의 권위자로 인식되고 있는 김태수의 주장을 먼저 인용해 보자.

“도서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인 각종 기록정보를 최선의 환경이래 수집하고 조직해둔 최고의 백과사전이며, 도서관목록은 이 사전에 수록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와 연결해 주는 고리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1999년에 출판한 『목록의 이해』에서 저자인 김태수가 목록의 가치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다. 다소 과장된 감은 있지만, 그의 주장대로 도서관목록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품고 있는 도서관과 그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고리”임은 분명하다. 그를 비롯한 국내외의 목록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식의 세계에 대한 이용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면서 그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정태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가 목록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용자의 지식세계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 주관적인 실체로 바뀌는 것이다(노지현 2009). 이처럼 목록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도서관의 지식세계를 능동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적 도구이며, 그러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목록을 찾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특정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서 본인이 찾고자하는 특정 자료의 소장 여부와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불특정 자료에 대한 포괄적 요구로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의 존재 여부 혹은 소장 여부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서관목록은 그러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이며, 그러한 ‘이용자 중심적 가치관’에 충실하였기에 도서관선진국의 사서들은 기술목록(descriptive catalog)과 주제목록(subject catalog)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온 것이다.<sup>9)</sup>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의 실정은 도서관선진국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특히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 사이에 퍼져있는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는 가히 중중이다. 우리 사서들 대부분이 도서관 이용자보다는 관리자의 시각에서 목록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 목록은 여전히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리스트’에 불과하다. 그렇듯 관리자 중심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었기에 우리 사서들에게 있어 편목업무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탐색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에게 ‘편리한’ 서지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사서들이 도서관 소장 자료의 주제별 관리를 위한 ‘분류목록’은 만들면서도 소장 자료에 대한 주제적 접근을 위한 ‘주제목록’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적 오류에서 출발한 ‘반쪽자리’ 목록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계에 퍼져있는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앞서 언급한 김태수를 비롯한 국내 목록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도서관선진국에서는 보

9) 물론 도서관선진국의 사서들이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이 설립되던 초창기부터 이용자 중심적 가치관을 폭넓게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 또한 ‘관리자 중심의 가치관’에 오랜 세월 젖어있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도서관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도서관목록 또한 ‘관용 소장 자료 리스트’에서 출발하였기에 이용자를 위한 탐색도구로서의 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가 너무도 크기에 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주제접근의 효용성 문제로 그들의 목록 또한 자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편적인 이용자 중심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도서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관리자 중심적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필자의 의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편찬한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그 첫 번째 단서가 있었다. 한국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전문용어사전에 도서관목록은 “일정한 구성방침에 의해서 작성된 특정 집서나 도서관의 소장 자료 리스트”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서 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기입 형식의 통제를 위해 일정한 구성방침(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목록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관리자 중심적 사고’와 ‘기능주의적 형식성’에 대한 강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이용자에 대한 고려와 목록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설명은 온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목록의 가치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인식적 오류는 전문용어사전의 개념적 왜곡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고 있다. 반세기 전에 도서관선진국으로부터 직수입한 관리자 중심적인 개념 정의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속되다보니 이용자 중심적인 가치관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전문용어사전의 시대착오적인 개념 정의가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의 뿌리라면, 그 오류의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여온 것이 편목사서의 양성을 위한 우리의 교육체계이다. 해방이후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거쳐 미국식 사서교육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서교육이 기능주의적 성격을 띠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편목교육은 그러한 기능주의적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편목교육의 주체들조차 목록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편목교육은 자연스럽게 목록의 ‘형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주제편목이 배제된 기술편목 위주의 ‘절름발이’ 교과 운영이 보편적인 상태에서 편목교육의 무게 중심은 목록의 원리보다는 기능에 그리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편목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들이 도서관 현장이나 학계로 진출하여 다시 편목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상황이 지난 수십년 동안 반복되면서 우리의 편목교육에서 편목의 형식성과 기능성에 대한 강조는 극대화 되었던 반면에 목록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설명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우리의 편목교육이 기능주의의 함정에 어느 정도 매몰되어 있는지는 2015년 현재, 34개에 달하는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목록’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을 분석

10)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는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사물을 언어로 표현하여 나열한 것을 말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자료목록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특정 집서나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전거목록의 통제를 통해서 일정한 구성방침에 따라 기술하고 작성한 기입의 총칭. 대개는 자관의 소장목록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도서관협회 2011). 이러한 개념 정의는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1983년에 편찬한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catalog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34개 학과에서 편성해 놓은 목록 관련 교과목(교과목의 명칭은 다양하다)은 두 강좌부터 일곱 강좌로 학과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든 학과에서 ‘분류’와 ‘편목’은 기본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sup>11)</sup> 모든 학과에서 편목업무를 위한 기본 교육은 나름대로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분류와 편목에 대한 기초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도서관 현장에 진출하는 새내기 사서들이 늘고 있다”면서 편목교육의 효용성을 비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다소 과장이 있어 보인다.<sup>12)</sup> 그러나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기초 교육의 부실”이 목록의 가치와 철학적 기반에 대한 교육의 소홀을 의미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다. 34개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분류’와 ‘목록’ 강좌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분류표의 사용법이나 편목규칙에 따른 목록작성법 등과 같은 기능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서직의 철학적 기반을 토대로 한 목록의 가치 탐구, 특히 이용자 관점에서 편목업무를 의미 찾기 등은 온전히 배제되어 있거나 간략한 소개가 전부이다.

이렇듯 목록 관련 교과목의 내용 자체가 편목업무를 기능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피교육자들의 관심과 흥미는 갈수록 약해진다. 그리고 예비사서들의 의식 속에서 편목업무는 “도서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를 엄격한 규칙과 형식에 맞게 재현해내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각인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기능 중심의 편목교육을 받고 편목업무를 현장에 투입된 새내기 사서들이 가뜩이나 관리자 중심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선임사서로부터 훈련을 받게 될 때, 그들이 과연 편목업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를 인류의 지적 자산에 수월하게 접근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편목업무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서로서의 자긍심을커녕 노동집약적인 생산 공정에 투입된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권태로움이 그들을 에워싼다. 이 연구를 위해 접촉했던, J대학도서관에서 2년 전부터 편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사서의 푸념에는 그러한 권태로움이 알알이 배어있다.

“편목업무가 제일 싫어요. 하루 종일 책하고 씨름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만 하잖아요. 할당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보통 40여권을 작업하는데 작업량이 많아 버겁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일의 성격이 마치 공장의 조립라인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지겨워요. 차라리 대출데스크에 앉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시간이라도 잘 가는데...”<sup>13)</sup>

11) 이는 「도서관법」에 명시된 사서자격(2급 정사서)을 취득하게 하려면 ‘자료조직론 I & II(실제 내용은 분류와 편목)’를 반드시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대부분의 사서 채용시험에서 자료조직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 박현영, “도서관 현장에서의 장서개발과 편목업무를 통해 본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 201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10. 12). pp.25-39.

13) 물론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대학도서관에서 편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서에게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편목업무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편목사서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상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는 ‘기능 중심적 교육’을 받고 도서관 현장에 투입되어 수십 년 세월을 ‘반쪽자리’ 기능인으로 살아온 중견 관리자급에 이르면 더욱 만성적이 된다. 특히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서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여 중견 관리자에 이른 고참 사서들의 편견은 가히 회복 불가능하다. 그들은 말한다.

“편목업무요? 몇 달 교육시키면 임시 직원이나 근로 장학생들도 곧 잘 해요. 요새는 KERIS 종합목록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자료는 복사편목하면 되고. 서양서나 동양서는 자체 편목보다는 외주를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예요. 최근에는 전자책이나 저널의 도입이 늘어나서 그나마 편목업무에 배정하던 전담 사서도 전자자료 수서업무를 겸하게 했어요.”<sup>14)</sup>

목록을 바라보는 중견 관리자들의 이러한 시각은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디지털 바람과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도서관경영자들의 시각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중시하는 경영자들의 시각에서 편목업무는 노동집약적인 ‘물먹는 하마’이다. 그러다 보니 편목업무는 항상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대상의 1순위이다. 그들은 말한다.

“도서관에 직원이 쓸데없이 많아요. 특히 편목같이 비용효과가 낮은 업무에 정규 사서들이 여럿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서들도 편목업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편목업무는 차라리 외주를 주고 잉여 인력은 다른 업무에 배치하거나 대학의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도서관을 위해서나 대학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sup>15)</sup>

이렇듯 예비사서도, 경력사서도, 중견 관리자도, 그리고 도서관경영자도 목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무지하고 편목업무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2015년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록의 품질을 도서관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그를 위한 편목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찌 도서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목록의 가치와 편목업무의 의미에 대한 인식적 오류가 도서관계 전체에 만연해 있다 보니 국가 차원의 편목정책도 비현실적으로 걸들게 되고,

---

황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그러한 도서관의 편목사서에게서는 철학적 향기는 물론이고 직업적 사명감이 느껴진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그리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해 목록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 도서관계에는 이러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명감을 품고 편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서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2015년 현재, 타의에 의해 편목업무를 맡게 된 대부분의 사서에게서는 J대학도서관의 A사서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권태로움이 배어있다.

14) K대학도서관 B팀장과의 면담에서.

15) S대학도서관 C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도서관계의 형편에 적합한 편목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요원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편목정책의 부재와 편목체계의 부실은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목록문제를 더욱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 2.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부재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가 목록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목록문제를 중증의 고질병으로 만들어 온 배경에는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부재가 있다. 편목사서로서 잔뼈가 굵은 중견 사서들은 말한다. “우리 도서관목록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편목정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편목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표준화된 목록형식과 규칙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적 위주의 경영논리에 오랜 세월 끌려 다녔다.”<sup>16)</sup>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우리의 도서관환경과 이용자들의 정보행태를 고려한 고유의 편목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도서관의 역사적 뿌리와 사서집단의 역량이 도서관선진국과 다르다면, 특히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가 그들과 다르다면, 그들의 도서관정책을 그대로 추수하기 보다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구의 도서관을 수입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에 적합한 ‘토착화된’ 도서관정책을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듯 ‘토착화’ 과정에서 실패했기에 서구의 도서관은 우리 토양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걸돌고 있는 것이다.

목록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서구의 목록을 수입은 했지만 우리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에 적합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고유의 편목정책이 우리에게 없었다. 물론 서구의 도서관을 수입해 오던 초창기에 그들의 분류체계와 편목규칙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분명하다.<sup>17)</sup> 그러나 초기의 어설픈 모방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우리의 편목체계는 그 때 이후 원조의 아류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편목체계의 구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 도서관계는 항상 원조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그러한 변화를 서둘러 수입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렇듯 주체적인 편목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고유의 시각에서 목록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차라리 허욕이었다. 토착적인 편목정책을 갖기에는 도서관사람들의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연구에서 ‘토착적인 문제’로 주목하고 있는 목록의 품질 문제나 편목사서의 역량 문제가 도서관계 차원의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sup>18)</sup>

16) 이 연구 과정에서 접촉한 일부 사서들, 구체적으로 편목조직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의 중견 사서의 이야기이다.

17) 그 결과, DDC로부터 KDC가 만들어졌고, AACR로부터 KCR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토착적인 편목정책이 부재하고 주체적인 편목체계조차 부실하다 보니 편목업무의 실무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나 도구의 개발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록에 주제명 데이터를 보충하려는 노력은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전거시스템의 개발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며, 전자자원의 편목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은 설계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편목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여 구축해온 ‘협력’ 기반 편목시스템은 우리 고유의 도서관 문화와 사서제도를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계가 우리 고유의 도서관문화와 인력제도를 반영한 토착적인 편목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한 주체적인 편목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토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부족과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부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목록문제를 우리의 토착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내고자 한 기초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며, 편목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체계가 너무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 가. 이론적 토대의 부족

우리 학계의 목록연구에서 이론적 연구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2011년에 발표된 김정현의 논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김정현 2011). 이 연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조직 분야에서 생산된 607편의 논문 중에서 이론적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는 연구는 10% 정도에 불과하며, 순수 이론 연구로 간주할 수 있는 논문은 10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의 모든 연구가 자료조직의 규칙이나 기법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가운데, 목록의 가치나 원리 등을 다룬 이론적 연구는 거의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목록의 기능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조차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기 보다는 단순 비교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편적이어서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김정현은 지적하고 있다.<sup>18)</sup> 이처럼 편목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기에는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내용적인 한계뿐 아니라 방법적인 결함으로부터 자유

18) 단지 1990년대 말부터 미국 도서관계가 목록DB의 품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의 일각에서도 목록DB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도서관계와는 달리 우리의 관심은 도서관계 차원에서 보다는 단위 기관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구체적으로, KISTI나 KERIS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그들이 구축하던 목록DB의 품질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목록DB의 품질 문제가 잠시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도서관계 전체 차원에서 목록의 품질 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삼았던 적은 없었다.

19) 결국, 이론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상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적 연구조차 목록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롭지 않은 실정이다.

목록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연구의 부족’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토착성의 결여’이다. 그 심각성의 정도는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생산된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물을 조사하여 ‘지적 토대의 특성’을 분석한 노지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노지현 2005).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자료조직 분야의 지적 토대는 미국을 비롯한 도서관선진국의 기법과 이론을 수입하면서 형성되었고, 그들의 기법과 이론을 탐구하는데 우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그들의 지적 토대에 대한 의존이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노지현의 지적처럼,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해 온 목록연구의 대부분은 도서관선진국의 새로운 편목기법을 소개하거나 편목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21세기로 들어와서도 상황은 변함이 없다. 도서관선진국이 새롭게 개발한 편목규칙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메타데이터의 형식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자들의 관심은 ‘우리의 현장’이 아닌 ‘그들의 현장’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고유의 지식문화와 정보행태를 반영하는 토착적인 목록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목록연구가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연구 주체의 편향성’ 문제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목록문제는 문헌정보학계의 고민이기에 앞서 도서관 현장의 고민이다. 따라서 목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서관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도서관선진국의 경우, 목록연구에 있어서 실증적 연구는 물론이고 이론적 연구에서조차 편목사서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편목사서의 업무경험과 문제인식이 목록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의 상황은 그들과는 너무도 상이하다. 목록연구에 있어 도서관 현장의 참여는 빈약함을 넘어서 참여의 흔적을 추적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물론 우리 도서관계의 업무환경이 실무사서의 연구활동에 우호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히 업무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실무사서의 연구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근본적으로 미약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현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학계에서 시의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목록연구에 있어서 우리 학계와 현장의 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하였고, 현장의 고민이 학계에 전달될 수 있는 채널조차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장의 고민과 학계의 연구가 철저히 괴리되는 모순된 상황이 오랜 세월 지속되었다. 도서관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수행되는 ‘실사구시적인 목록연구’가 우리 현장에서는 캐치 프레이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현장의 협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계만의 단기적이고 대중적이고 서구 추수적인 연구로는 우리의 목록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없었다. 현장의 고민을 배제한 학계만의 ‘반쪽짜

리' 연구로는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확보는커녕 편목체계의 혁신을 위한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조차 버거웠기 때문이다.

#### 나. 정책 추진체계의 부실

'이론적 토대의 부족'이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을 가로막은 정신적 장애라면, '부실한 정책 추진체계'로 인한 물리적 장애 또한 만만치 않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우리의 편목정책이 외형적 빈곤을 넘어서 내용적 부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편목정책에 관련된 추진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핵심 주체들의 관심과 역량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기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의제를 취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행정조직,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수립하여 정책의제로 부각 혹은 제안하여야 하는 전문직 단체에 이르기까지, 편목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핵심 주체들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책 추진체계 자체가 허술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도서관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정위)조차 목록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고 편목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무심하다보니 국가 차원의 편목정책은 걸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20)</sup>

이렇듯 국가 차원의 정책기구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목록문제에 대해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 행정조직인 도서관정책기획단(이하 도정단)<sup>21)</sup>이 관심을 가질리는 만무하다. 실제로 도정단이 목록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도정단의 업무분장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다. 편목정책은 그들의 담당 업무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2015년 현재, 과거에 비해 축소된 규모의 도정단 직원 중에는 목록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고사하고 도서관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조차 희귀해 보인다.<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 목록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온 방계 조직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와 KERIS의 학술정보부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편목정책의 주무 부서로 기능하기에 그들은 여러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들의 업무가 목록시스템의 기능적인 면에 치우쳐 있고 공조 대상 또한 공공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이처럼

20) 도서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기구가 목록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목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무심하다는 증거는 2008년과 2014년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생산한 '제1차,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종합계획의 어디에서도 목록문제에 관련된 정책과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1) 2007년 출범 당시의 명칭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30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 단위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대학도서관진흥법 등이 제정되면서 도서관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기능이 분산되고, 그 결과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업무가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그 과정에서 도정단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조직 규모 또한 '국'에서 '과'로 축소되었고 부서 명칭도 '도서관정책기획단'으로 바뀌었다. 2015년 10월 현재, 부서 직원은 12명으로 감축된 상태이다.

22)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 도서관정책 담당 조직이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다. 2015년 현재, 6급 과건 주무관 1명이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정책과 학교도서관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목록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편목정책을 주관할만한 행정조직을 우리 도서관계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기구와 행정조직에 더해서 전문직 단체의 수동적인 행태와 소극적인 활동에서도 정책 추진체계의 부실은 여실히 드러난다.<sup>24)</sup> 주지하다시피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목록위원회는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유일한 목록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따라서 목록문제에 대한 제반 논의는 동 위원회에서 정책적 의제로 다듬어져서, 앞서 언급한 도정위나 도정단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추진 과정이다. 그러나 목록위원회의 기존 활동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원회의 주요 관심사가 편목규칙의 개정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에 쏠려있기도 하지만, 목록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하기에는 조직적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위원회의 규모 자체가 영세한데다가 위원의 교체마저 빈번하다보니 위원회의 활동이 구조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게다가 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마저 미미하다보니 외형적인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 그들이 목록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

정리하면, 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주체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그리고 전문직 단체 등이 모두 조직의 역량이나 인력의 전문성에 있어 부실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5년 현재 우리 도서관계의 모습이다. 정책 추진체계가 부실하고 핵심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토착적인 편목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사서직의 존재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목록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라 가볍게 대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 IV. 목록문제의 해법

지금까지 논의하였듯이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목록문제가 ‘인식의 오류’와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면, 목록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어차피 없다. 단지, 지금부터의 논의를 통해 문제의 증상을 외형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중적인 대책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실효적인 처방을 모색하고자 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목록문

23)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의 주요 업무는 국가문헌종합목록의 관리, KORMARC의 운영과 표준화, 주제명관리시스템의 운영, 전거데이터의 구축 등과 같은 국가 목록시스템의 기능적인 요소에 치우쳐 있다. 2015년 현재, 5명 남짓한 인력이 국가 목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편목업무와 관련한 KERIS 학술정보부의 주요 업무는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이며, 2015년 현재, 1명의 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4)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등과 같은 관종별 전문직 단체들의 경우에는 목록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목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과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부재’를 바로 잡기 위한 처방을, 관련 학자들의 주장과 현장 사서들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지금부터 강구해 보고자 한다.

### 1. 목록에 대한 인식 개선

도서관계 내외에 확산되어 있는 목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목록에 대한 ‘辭典的 개념 정의’의 수정과 보완이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목록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개념 정의부터 수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온 “도서관 소장 자료의 관리를 위한 리스트”라는 관리자 중심적인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목록에 내재해 있는 이용자 중심의 숭고한 가치를 도서관계 내외에 알리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목록이 “인류의 지적 자산인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도서관이용자의 지식세계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이며 주관적인 실체”라는 가치론적 설명을 전문용어사전에 반드시 반영하여 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전적 오류의 수정이 인식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면, 본격적인 행보는 편목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이어가야 한다. 즉, 편목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혁신하여 예비 사서들로 하여금 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지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편목교육은 초창기부터 ‘기능성과 형식성’의 그물에 갇혀 있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여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편목 관련 강좌의 대부분은 편목도구의 사용법이나 편목규칙에 따른 기술법과 같은 기능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전국 34개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편목 관련 강좌의 교수계획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명색이 대학의 전공강좌인데 그들 교수계획표는 ‘목록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논의는 건너뛰고 ‘편목도구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만이 그득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서관학을 수출한 미국의 실상도 우리와 유사한가? 결론부터 밝히자면, 미국 도서관계의 편목교육은 우리의 ‘비정상적인’ 모습과는 상이하다. 가령,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추천하고 있는 편목강좌의 내용에는 “목록에 내재된 원칙과 원리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 항목으로 등장한다.<sup>25)</sup> ALA의 전문 분과 중의 하나인 ALCTS에서 제시하고 있

25) “편목을 위한 실무 기술”과 “편목시스템의 활용법”에 관한 것도 편목강좌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지만, 편목을 위한 실무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목록의 철학과 원리를 이해시키는데 편목교육의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ALA, “Core competences of librarianship,” Final version(2009),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careers/corecomp/corecompetences/finalcorecompstat09.pdf>> [cited 2015. 10. 15].



는 편목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목록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강조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편목교육을 통해 피교육자가 숙지해야 하는 첫 번째 강좌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6)</sup> 이처럼 도서관선진국에서의 편목교육은 목록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정보행태에 적합한 목록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기법을 동시에 숙지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철학과 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그들 통해 도서관환경과 정보행태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예비사서들이 스스로 갖추어 가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서관선진국의 상황은 기능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상이하다. 그들의 제도를 수입해 오면서 껌데기만 모방한 결과이며, 그와 같이 잘못된 모방의 후유증으로 우리 도서관계에서 목록의 가치는 폄훼되고 편목업무는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목록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정상화’하려면 편목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도이다. 물론, 편목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인력제도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도서관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해야 할 첫 번째 오류는 편목 관련 강좌를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이다. 34개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절반만이 편목강좌를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예비사서들로 하여금 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편목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을 편목사서로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편목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비사서들로 하여금 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편목업무를 위한 기술과 기법을 ‘능동적으로’ 터득해 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편목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끌어 올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단선적인 강좌 구성과 기능 중심적인 강좌 내용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의 관심조차 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그들이 선택한 전공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편목규칙과 기입방법 중심의 지루한 ‘단순 반복 작업’에 노출될 때, 그것도 저학년 과정에서 노출될 때, 편목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고사하고 문헌정보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6) ALCTS(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 & Technical Services), Educational policy statement(1995), <<http://www.ala.org/ala/mgrps/divs/alcts/about/governance/policies/cepolicy.cfm>> [cited 2015, 10. 15].

이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도서관선진국의 편목교육을 다시 한 번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처럼 편목교육을 ‘이원화’ 혹은 ‘단계화’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요구에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원화 전략’을 구체화한 교과 편성과 운영이 국내의 일부 학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즉, 편목강좌를 기초 단계와 고급 단계로 나누어 편성하되, 기초 강좌는 필수 교과목으로 고급 강좌는 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이다.<sup>27)</sup> 이 때 강좌의 내용도 차별화하여, 기초 강좌에서는 철학과 원리 중심의 교육을 통해 목록의 가치와 편목의 의미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 고급 강좌에서는 편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시적인 기술과 기법을 집중적으로 숙지시켜 실무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고급 강좌는 편목사서로서의 경력 개발에 관심이 있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편목강좌를 이원화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편목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교수인력의 영세성은 매우 심각하여 세부 전공별로 전공 교수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학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과에 따라 많게는 7명에서 적게는 2명의 교수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핵심 영역에서조차 전공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즐비하다. 자료조직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2015년 현재, 34개 문헌정보학과에서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학과는 1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개 학과에서는 비전공 전임 교수 혹은 시간강사가 편목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8)</sup> 절대 다수의 학과에서 전공 교수조차 없는 ‘절름발이’ 편목교육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어찌 목록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수될 수 있었겠는가?

마지막으로,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견 사서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능’ 중심의 반쪽자리 편목교육을 이수하고 편목업무에 종사해온 중견 사서들 가운데는 목록에 내재한 철학과 원리에 무지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편목업무를 기능적인 업무로 간주하기에 도서관 운영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외주조차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직이 그러하듯이, 새내기 사서의 의식과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중견 사서라는데 있다. 목록의 가치에 대한 중견 사서의 인식적 오류는 새내기 사서에게 그대로

27) 가령,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기초 교과목으로 「지식분류론」과 「정보조직론」을 2학년 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정보조직실습」과 「정보조직특강」을 각각 3학년, 4학년 과정에 선택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8) 특히 2015년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 교수 인력 양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연세대학을 비롯한 성균관대학, 중앙대학, 이화여대 중에서 이화여대만이 자료조직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편목교육의 전문성 결여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전염된다. 편목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새내기 사서들에게서 목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식적 오류의 대물림 현상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인식적 오류에 젖어있는 증견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의 증견 사서들이 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목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 2.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

앞서 논의하였듯이,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부재’는 목록문제를 만성적 질병으로 만들어온 기본 요인 중의 하나이다. 토착적인 편목정책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고 ‘정책의 추진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편목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서는 목록문제를 우리 고유의 시각에서 풀어내기 위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편목정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지 작업을 통해 목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와 물리적 도구를 온전히 갖추게 될 때, 기존의 비합리적인 편목체계를 우리의 토양과 체질에 적합한 합리적인 편목체제로 혁신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정책의 이론적 토대 강화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려면, 기존의 목록연구가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세 가지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기능 중심적인 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론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목록에 내재한 철학과 원리를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가령, 목록의 가치와 의미를 지식문화의 복합성과 정보행태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목록연구의 이론적 요소는 배가되어질 수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목록의 원리와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관리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관점과 행태에 비중을 두려는 노력이다.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는 목록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용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며, 그러한 기초 데이터가 방대하게 축적될 때 목록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나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론적 토대의 강화를 위해 두 번째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종속적인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목록연구가 도서관선진국의 경험과 논리에 과

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우리 도서관 현장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을 철저히 반성하여야 한다. 우리 목록연구자들이 간과했던 것은 도서관선진국의 논리와 해법이 그들의 경험, 즉, 그들의 목록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목록문제는 우리와 본질도 다르고 원인도 다른데, 어찌 그들의 경험에 근거한 논리와 해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의 토대에서 우리의 빈약한 연구 경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목록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토착적인 연구가 커켜어 누적되어 다양한 목록이용자 집단들의 고유한 정보행태적 특성이 날날이 밝혀질 때, 그 때 비로소 우리의 목록문제 해결에 적합한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학계 주도의 연구 편향성에서 벗어나 현장 사서의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2015년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목록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미미하다. 가령, 지난 10년 동안 자료조직 전체 분야에서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공 학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sup>29)</sup> 이런 상황에서 편목정책, 그것도 토착적인 편목정책의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강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차라리 허욕이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도서관선진국에서처럼 편목사서에 의한 목록연구를 활성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도서관의 조직문화와 인사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실무 사서들이 자신의 업무분야를 전문화하도록 고무하고, 업무역량의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현장연구에 스스로임없이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지려면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장 사서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서들은 그들의 문제를 학계의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때 문제의 해결이 수월해 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문제해결 방안을 학계와 현장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연구풍토가 형성되는 것이다. 학계와 현장의 협력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있어 ‘공동연구’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따라서 현장이 발주하고 학계가 수행하는 단순한 위탁연구보다는 현장 사서가 연구의 전체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동연구는 현장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학계의 처방을 실사구시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학계와 현장이 전문가 포럼이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사례 중심의 ‘암묵지 저널’을 공동으로 발간함으로써 양자의 소통은 구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듯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채널이 다양해질 때, 현장은 물론이고

29)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4년제 대학에 설치된 34개 문헌정보학과에서 자료조직 강의를 담당하고 자료조직 전임 교수가 10여명에 불과한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학계의 주체적인 연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목록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이론적 토대의 강화가 중장기 과제라면, 편목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조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은 단기적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그리고 전문직 단체의 구조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은 관계자들의 실천 의지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핵심 주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정책기구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정위부터 도서관정책의 기초를 바로세우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한다. 도정위가 도서관정책의 기초를 현재와 같이 도서관의 외형적, 물리적 성장에 두는 한,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서관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장서의 가시적인 확충이 정책적으로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목록문제처럼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이지만 투자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의제는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정위의 정책기조가 외적 성장에서 내적 성장으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제고로, 그리고 시스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목록문제 또한 전체 도서관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도정위의 정책기조 변화가 거시적 관점에서 절실하다면, 편목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조직을 다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은 실무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기본적인 작업은 물론 도정단의 조직 개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도정단으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목록문제에 관심을 갖고 편목정책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보다는 목록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해온 방계 조직들을 정비하여 행정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편목정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편목정책은 KERIS의 학술정보부가, 그리고 전문도서관의 편목정책은 KISTI의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전담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관중에 따른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제안이다. 도정단은 그러한 방계 조직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취합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편목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역량을 체계화하자는 것이다.

정책기구와 행정조직의 개편에 더해서 전문직 단체의 기능 또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의 핵심은, 앞서 행정조직의 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의제를 발굴하는 책임을 대표 단체(즉,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만 부과하지 말고 다양한 전문직 단체로 분산하여 다변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다. 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공공도서관협의회, 전문도서관

협의회, 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의 관중별 협의체에도 목록위원회를 구성하여 목록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의제를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도협의 목록위원회는 관중별 협의체들이 발굴한 정책적 의제를 수렴하고 조율하여 정책기구나 행정조직에 제안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직 단체들의 정책 발굴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제의 발굴 통로를 다변화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목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다. 도착적인 편목체계의 구축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나면,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고유의 목록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편목체계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즉, 우리의 도서관문화와 사서직 제도에 적합하면서, 편목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편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현행 편목체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을 축으로 하는 편목체계와 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시스템(UNICAT)을 축으로 하는 편목체계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시스템 운영방식에 있어서 KOLIS-Net과 UNICAT은 모두 분산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목록DB은 회원도서관들의 협력을 통한 분담편목의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한 분담편목체계는 편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지만, 편목업무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 또한 낳고 있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보인다. 분담편목체계를 원칙대로 운영하기에는 우리 도서관계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논점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 도서관계의 역량에 걸맞은 새로운 편목체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편목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는데 주어진다면,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령, 현 단계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편목체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중앙집중식 편목체계와 ‘보완된’ 분산체계가 그것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전자는 국가 차원에서 편목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목업무(original cataloging)를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편목업무의 효율성과 목록의 품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지만, 원목업무의 역량을 소수의 편목사서를 통해 유지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분담편목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제 도서관들을 미리 지정하고 주제 도서관마다 원목업무 전담팀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편목업무의 역량과 목록의 품질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지만, 분산체계가 늘 그렇듯이 주제 도서관들의 책무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분담편목체계가 안고 있는 결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두 가지 대별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그 방안들은 어차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범례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이제환 2001; 노지현 2009). 따라서 어떠한 방안을 택하든지 혹은 제3의 방안을 모색하든지, 길라잡이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토착적인 편목체계’를 개발하거나 구축함에 있어 그 시작과 끝은 온전히 목록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치열한 논쟁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계에는 그러한 논쟁이 태생적으로 빈약하고 참여 의지 또한 심히 부족하다. 남들이 개발해 놓은 제도를 수입해 쓰는데 익숙하다보니 그들의 틀에 우리의 행태를 맞추려는 종속적인 모습만 도처에 넘쳐난다. 이러한 종속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편목체계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목록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한 논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한 논쟁에 목록을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목록을 만드는 사람과 목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다양한 견해가 골고루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논쟁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 도서관계의 토양과 역량에 적합한 편목체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V. 글을 마무리하며

“목록이요? 솔직히 말해서 책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걸핍기식의 정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책을 읽어 보지조차 않은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요. 목록에 있는 정보라는 것이 책을 선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나아져서 목록에 책에 대한 부가정보를 연결해 놓아서 (비록 사서가 직접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책에 대한 부가정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적잖이 들어가요. 그래서 출력화면에서 몇 개 확인하고 대충 검색을 끝내곤 해요. 목록 자체에 데이터가 많아서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면 정말 좋겠어요.”

목록에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불만이다. 목록의 껍데기가 화려해졌는데 알맹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조차 없이 “목록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의문이다. 물론, 모든 도서관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여러 목록이용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목록이용자들의 이러한 불만과 지적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도서관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다. 도서관사람들은 우리 목록이 태생적인 장애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역량도 스스로에게 부족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오랜 세월 그들 스스로 편목업무를 방치하고 단순노동으로 폄하시켜 왔기에 이제 와서 목록의 품질을 제고하고 편목업무를 역량을 강

화한다는 것이 결코 녹녹치 않다는 사실 또한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결코 녹녹치 않은 일이지만 이제라도 그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 땅에 사서라는 직업이 계속 남아있으려면 이제라도 학계와 현장 모두 목록문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단언컨대, 목록이 가치를 잃어가고 편목업무가 의미를 상실해 가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또한 목록연구가 토착성을 상실하고 편목강좌가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현장은 물론이고 학문의 미래는 없다. 사서직의 규모는 나날이 축소되고 사서직의 위상은 결국 '기능직'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문헌정보학과는 나날이 줄어들고 문헌정보학자의 위상은 결국 '떠돌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목록은 단순한 '소장 자료 리스트'가 아니라 사서직의 뿌리이자 열매이며, 목록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편목(자료조직)은 사서만의 배타적 업무이자 문헌정보학자만의 독점적 이론이다. 지식을 분석하여 대체물을 만들고 그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작업은 사서와 문헌정보학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영역을 스스로 편취해 온 것이 우리 도서관 현장과 학계이다. 아마도 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환영과 도서관의 외형적인 성장이 그들로 하여금 착시현상과 판단착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필자가 항상 강조하듯이, 디지털 기술은 도서관사람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요 도서관은 사서직과 동일한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술적 발전과 물리적 성장을 사서직의 성장으로 착각하는 미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2015년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도서관의 성장이지 결코 사서직의 성장이 아니다. 길을 막고 그들에게 물어보라. 도서관의 증설을 원하는지 혹은 사서직의 증원을 원하는지. 그들은 주저 없이 답할 것이다. 사서직을 줄여서라도 도서관과 책을 늘려달라고...

## 참고문헌

- 김선애, 이수상. 2006. KOLIS - NET 종합목록 DB의 품질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95-117.
- 김정현. 2011.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49-164.
- 노지현. 2003.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의 품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107-134.
- 노지현. 2005. 한국 자료조직 연구의 지적 토대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329-351.
- 노지현. 2009.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파주: 한울.



- 노지현, 이미화. 2014. 국제 목록 동향을 반영한 「KORMARC-전거통제용」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61-84.
- 박옥남. 2011. 정보조직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47-267.
- 윤정옥. 2003.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품질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27-42.
- 이미화. 2012. 대학도서관 전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전거제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5-26.
- 이유정. 2006. 편목시스템의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 77-94.
- 이은주. 2014. 이용자 요구 기반의 도서관목록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431-458.
- 이은주, 이제환. 2012.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목록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49-77.
- 이제환. 1997. 『분산체제로 구축된 통합 DB의 품질검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대전: 연구개발정보센터.
- 이제환. 2002. 공동목록 DB의 품질평가와 품질관리: KERIS의 종합목록 DB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61-89.
- 임정주, 노지현. 2015. 도서관목록의 주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제명 데이터의 품질 비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015년 5월 29일. 부산: 동의대학교, 193-20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eong-Hyen. 201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149-164.
- Kim, Sun-Ae and Lee, Soo-Sang. 2006. "Quality Evaluation of a Shared Cataloging DB : the Case of KOLIS - 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1): 95-117.
- Lee, Eun-Ju and Lee, Jae-Whoan. 2012. "Meanings of Library Catalog in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49-77.
- Lee, Eun-Ju. 2014. "Redesign of OPAC based on College Students' Information Needs : The Case of P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431-458.

- Lee, Jae-Whoan. 2002. "Quality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 Shared Cataloging DB: the Case of KERIS UNICAT DB."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1): 61-89.
- Lee, Mihwa. 2012.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5-26.
- Lee, You-Jeong. 2006. "A Study on Evaluation of Usefulness of the Automated Cataloging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1): 77-94.
- Park, Ok Nam. 2011. "Knowledge Structures in Knowledge Organization Research: 2000-2011."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47-267.
- Rho, Jee-Hyun and Lee, Mihwa. 2014. "A Study on the Revision of KORMARC-Authority Format b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of Authority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61-84.
- Rho, Jee-Hyun. 2003. "Quality Evaluation of Library Catalogs: with an Emphasis on 'Ut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107-134.
- Rho, Jee-Hyun. 2005.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Catalog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1): 329-351.
- Rho, Jee-Hyun. 2009. *Ideals of library catalog & realities of Korean catalog*. Paju: Hanul.
- Yim, Jung-Ju and Rho, Jee-Hyun. 2015.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Subject Data in Library Catalogs, Bookstore, Social Tagging Site." *Proceedings of the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93-202.
- Yoon, Cheong-Ok. 2003.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Records of the Serials Union Catalog Datab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27-42.